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중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민안하) 텔 PSPD, 나우누리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 723-5056)
제 목 제2의 강정우어린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한다
날 짜 1998. 9. 16 (총 2 쪽)

성 명 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아비를 욕하기 전에

- 빈곤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저소득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한다
-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온나라를 경악케 했던 초등학생 손가락 절단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의 비정한 범죄였음이 밝혀졌다. 비정한 그 아비를 지탄하고 인륜이 땅에 떨어진 사회풍조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인면수심의 한 아비가 저지른 비정한 범죄라는 도덕적 잣대로만 보기에는 우리사회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자리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하게되고 그에 따른 가출과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우리사회 저소득 실업자 가족의 전형적 길을 걸었던 이들 부자는, 끝내 생계형범죄에 대한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고 만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사회적으로 들끓었던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마산의 강군에게까지는 전달되지 못했다. 배고픔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었던가?

정부가 저소득 실직자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내어놓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책이라고 하는 것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만 조금 확대되었지, 최저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의 70% 이상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들 대부분이 생활을 유지할 기본칼로리에도 못미치는 음식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녀의 보육비, 학비조차 못내, 결국 수용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는 한 조사결과는 제2, 제3의 강군과 같은 어린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대량실업사태가 가족해체와 생계형범죄의 창궐, 통제되지 않는 사회적 소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저소득계층의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입법화해야 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니 하며, 더더군다나 '복지병'까지 들먹이며 적극적 대책을 미루어 온 정부는 강군의 잃어버린 새끼손가락 한마디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실업대책의 최우선이라며 한사코 빈곤층의 생계지원대책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재계와 경제관료들, 소위 경제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근간인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질문하고 싶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강군을 위한 시민들의 모금소식만 들려올뿐,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느덧,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든 겨울이 오고 있다. 냉방에서 멀고 있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한번 빈곤층과 저소득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한 아버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끝.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